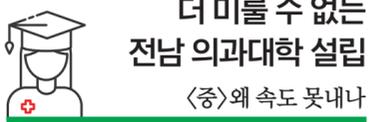


동·서부권 유치전 제각각...정치권 지역갈등 부추겨



**더 미룰 수 없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
〈중〉왜 속도 못내나

전남 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데는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발미로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골든타임 격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됐고, 여야 정치권도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지역 의료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남 의대 설립을 두고 미온적인 정치권의 움직임은 지난 18일 열린 국민의힘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의료성을 확보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 등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의대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전남, 전북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 수급이나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 및 교육부와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터지는 중앙 발 이슈들에 파묻혀 전남 의대 관련 논의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지역 여론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잠잠하다.

김원이 의원(목포)이 지난 5월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아 논의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지역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시원찮다. 공동발의자 15명 중 광주·전남 지역구는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과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등 2명뿐이다.

한국에 역량을 집중해도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동·서부로 갈라져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려 혈안이 돼 있는 점도 지적된다.

김원이 의원이 목포대를 겨냥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물론이고, 동부권의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도 오는 27일 국회에서 국립의대 관련 토론회를 연다. 그러나 토론회 패널조차 노골적으로 동부권 위주로 구성해 자칫 소지역주의의 간 대결로 비화할 조짐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생각도 없는데 전남 동·서부만 ‘그

김원이·소병철, 목포·순천 대결 구도 소지역주의 팽배...추진동력 ‘찬물’ 국힘, 광주 예산협서 지원 ‘미지근’ 의정협 중단 2년...의료계 반대 여전

들만의 리그’에 빠져 역량을 낭비하는 셈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신설을 발표한 이후 지금껏 논의에 진척이 없어 지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불씨를 살려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오히려 혼선을 야기하고, 동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자질마져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맹렬히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합의점을 찾자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구성한 의정협의제도 2년 가까이 활동을 멈추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다.

논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12월 첫 회의에서 의대 신설과 의사인력 확대 논의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열린 6차례 의정협의체에서는 지역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만이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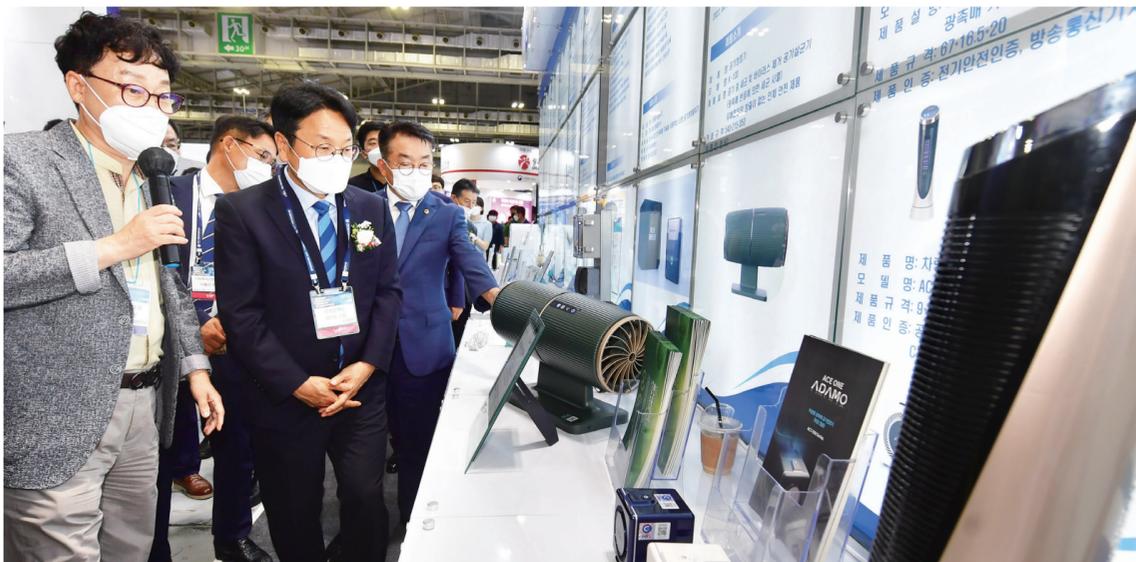
복지부는 이후 지난해 2월 열린 7차 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대 논의를 의료계에 제안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전남 의대 신설 논의도 재개될 것이란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 의협이 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의협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을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이후’로 못 박아서다.

의료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할 시기라는 정부와 시기상조라는 의사단체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기대를 모았던 의대 신설 논의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후 지금까지 의정협의체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김원이 의원의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역 의대를 설립하면 지역 의사 인력이 양성된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선우 기자



21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국제 IoT·가전·로봇 박람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성호 기자

‘산업+미래기술의 융합’ 한자리 모였다

‘그린카·뿌리·로봇’ 전시회 개막

3일간 총 280개 기관·업체 참여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와 그린카 전시회, 사물인터넷(IoT) 가전로봇 박람회가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동시개막해 3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3개 행사에는 280개 기관·업체 등이 450개 부스를 마련해 분야별 기술을 선보인다.

넥쏘 수소차, 니로 EV, GV60 등 전기차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차량 등 다양한 완성차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금형산업진흥회 공동관에서는 사출 금형, 절삭공구, 프레스 금형 등 국내의 최신 기기를 출품했으며 공군군수사령부는 항공무기체계 부품 견본을 전시했다.

광주 공동브랜드 지엘(GIEL) 홍보관은 인지도는 낮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의 가전제품을 소개했다.

13개국 53개사 바이어가 참여한 수출 상담회, 광주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포럼, 로봇 가전 산업육성 기술 세미나 등 부

대행사도 이어진다.

특히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성공적 발사를 기념하고 누리호에 실린 조선대 연구팀의 큐브 위성 ‘스텝 큐브-2’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포럼도 관심을 끌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경쟁력을 키워온 3대 주력 전략산업의 현재와 더 높은 성장의 꿈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기초산업인 뿌리산업과 신성장 미래 먹거리산업인 친환경 자동차, 로봇·스마트 가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민선 8기 시·도 상생위 28일 첫 테이블

반도체단지 등 협력과제 주목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에 추진할 시도 상생 과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위원회에는 양 시도지사과 실·국장 등이 대거 참여해 그동안 상생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

하고 신규 과제를 논의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은 1호 상생 과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전인 지난 달 24일 단들이 만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전남 국립 의과대 설립, 광주·전남 공항 이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두 단체장은 반도체 단지를 대구·경북까지 넓혀 추진하고 전남 의과대 설립은 전남뿐 아닌 광주·전남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 아래 공동 의제로 삼기로 했다.

시도는 앞서 지난 14일 상생발전 실무위원회를 열고 신규 협력과제 11건을 도출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호남권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도로 건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등이다. /오선우 기자

INSIDE NEWS

도심 상가 안전불감증 심각 ▶7면
기획 / 정기명 여수시장 ▶11면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남구와 함께 내 일(JOB)을 잡(JOB)아 보자!

● 취업상담센터

- 취업연계종합서비스 (구인구직등록, 상담, 취업알선)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 일자리박람회

- ON-OFFLINE 박람회
- 맞춤형 취업컨설팅
- 구인기업정보제공

● 공공일자리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생계안정
-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광주광역시남구 취업상담센터 062. 607. 2672